

서울시 제출용 정책제안서

청년 한끼이음 플랫폼

청년과 지역 상생가게를 연결하는 통합 식사지원체계

청년의 식생활 안정과 지역 상권의 지속가능한 상생을 위한 통합정책

제안 대상 : 서울특별시

정책 분야 : 청년복지 · 식생활 지원 · 지역경제 · 골목상권 활성화

작성 기준일 : 2026년 7월

목차

- I. 정책제안 요약
- II. 제안 배경 및 필요성
- III. 서울시 기존 정책 현황과 정책공백
- IV. 정책제안 내용
- V. 소요예산(안)
- VI. 법적 · 제도적 검토
- VII. 개인정보 보호 및 낙인감 방지 설계
- VIII. 추진체계 및 기관별 역할
- IX. 시범사업 실행계획
- X. 성과지표 및 평가계획
 - X I. 위험관리
 - X II. 단계별 확대 로드맵
 - X III. 기대효과
- XIV. 정책 확정 전 병행 협의·확인 과제
- 부록. 출처 및 핵심 수치 근거표

I. 정책제안 요약

청년 한끼이음 플랫폼은 청년몽땅정보통을 통한 정보 통합, 서울페이 기반 식사포인트 지급, 민간·지역 상권 연계라는 세 가지 축으로 청년의 식생활을 안정시키고 지역 상권과의 지속가능한 상생을 실현하는 통합정책이다. 이 정책은 완전히 새로운 앱이나 사업을 만드는 안이 아니라, 서울시가 이미 보유한 포털·결제·데이터·1인가구정책·상권정책·민간 네트워크라는 분절된 자산을 서울시 차원에서 재조합하는 통합 설계안이다.

서울시 1인가구는 2023년 기준 약 163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39.3%를 차지하며, 이 중 29세 이하가 26.3%에 이른다. 서울시 조사에서 1인가구가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은 '균형 잡힌 식사'(4.79점)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2021~2025) 음식서비스 물가지수는 약 24.7% 상승하고 가계 소비지출 중 식비 비중을 뜻하는 엔겔계수는 30%를 넘어 1990년대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이러한 물가 압박 속에서 2026년 3월 등장한 민간 저가식당 지도 서비스가 출시 11일 만에 누적 방문 4.5만 건, 약 3주 만에 이용자 94만 명 수준까지 확산된 현상은 저렴한 식사처를 찾으려는 생활 수요가 매우 크다는 점을 보여주는 유효한 보조 근거다.

서울시에는 이미 동작구의 직접 식비지원, 서울시 청년 1인가구 소셜다이닝 '건강한 밥상', 서울페이·서울사랑상품권 인프라, 착한가격업소 공공데이터, 민간의 나비암·선한영향력가게 네트워크가 각각 존재한다. 그러나 이 요소들을 서울시 전역의 청년이 한 화면에서 찾고, 낙인감 없이 결제까지 연결하는 통합체계는 공개자료상 확인되지 않는다. 이것이 본 정책이 겨냥하는 핵심 공백이며, 따라서 청년 한끼이음은 청년몽땅정보통을 신청·지도 진입창구로, 서울페이/서울사랑상품권 계열 인프라를 식사포인트 발행·결제로, 착한가격업소 데이터를 기본 가맹점 지도 데이터로, 건강한 밥상과 1인가구지원센터를 관계형 프로그램 연계축으로, 민간 나눔 네트워크를 후원·추가 가맹점 연계축으로 삼는 통합 구조를 제안한다.

표. 제안 배경 및 필요성

국가데이터처(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1~2025) 음식서비스 물가지수는 약 24.7% 상승했으며, 연도별 상승률은 2021년 2.8%, 2022년 7.6%, 2023년 6.0%, 2024년 3.0%, 2025년 3.0%로 나타난다. 2026년 1월 기준 외식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9% 상승해 같은 시기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2.0%)을 상회했다. 가계 소비지출 중 식비 비중을 뜻하는 엔겔계수는 30%를 넘어 1990년대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어, 식비 부담이 청년을 포함한 모든 가구의 생활 안정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로 자리잡았다.

2026년 4월 기준 서울 지역 주요 외식품목 가격은 비빔밥 11,692원, 짜장면 7,731원, 삼겹살(1인분) 18,154원, 냉면 12,615원 수준이며, 별도 보도에서 인용된 참가격 기준으로는 김밥 3,800원, 칼국수 9,962원, 삼계탕 18,154원 수준으로 확인된다. 이 가격 수준은 월 6만 원 내외의 식비 지원이 '완전한 식비 대체'가 아니라 '부분 보조'로 정책 목표를 설정해야 함을 시사한다.

서울시 1인가구는 2023년 기준 약 163만 가구로 서울 전체 가구(약 414만 가구)의 39.3%를 차지하며, 이 중 29세 이하가 26.3%를 차지한다. 전국적으로도 2024년 1인가구는 804.5만 가구(전체 가구의 36.1%)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서울시 청년정책 자료를 종합하면 서울 청년 인구는 약 286.6만 명이며, 서울 청년 가구 약 120만 가구 중 64.5%가 1인가구로 나타난다. 이는 본 정책의 핵심 타깃을 '서울 청년 일반'보다 '청년 1인가구'에 맞추는 것이 정책 효율성과 정합성 면에서 더 타당함을 뒷받침한다. 서울시 조사에서 1인가구가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 '균형 잡힌 식사'가 4.79점으로 제시된 점, 서울시민 재현 데이터 분석에서 청년 1인가구가 다른 연령대 1인가구보다 '전자상거래'와 '식당' 소비 비중이 높다고 나타난 점을 함께 고려하면, 청년 1인가구는 식비를 회피하기 어려우면서도 저렴한 식사처를 탐색하려는 수요가 매우 크다.

2026년 3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문화에서 출발해 등장한 민간 저가식당 지도 서비스는 위치 기반으로 가격대별 필터링이 가능하고 이용자가 직접 식당 정보를 제보하는 구조로 운영되며, 출시 11일 만에 누적 방문 4.5만 건, 약 3주 만에 누적 이용자 94만 명 수준까지 확산되었다. 이는 청년의 빈곤을 직접 증명하는 통계는 아니지만 저렴한 식사 정보에 대한 생활 수요가 매우 크다는 점을 보여주는 유효한 보조 근거다. 다만 이 서비스는 대상자격 판정, 공공 바우처 지급, 품질 검증, 후원금 회계,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갖추고 있지 않으므로, 공공정책은 이를 대체하기보다 제도화하고 보완하는 방향으로 설계해야 한다. 또한 명칭 자체가 낙인감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본 제안서를 포함한 정책 문서에서는 이 서비스를 '민간 저가식당 지도 서비스'로 표기한다.

지표	수치	시점·출처	의미
최근 5년 음식서비스 물가지수 상승률	약 24.7%	국가데이터처 KOSIS(2021~2025)	식비 부담의 구조적 확대
2026.1월 외식물가지수 전년 동월비	+2.9%	국가데이터처	전체 소비자물가(2.0%) 상회
엔겔계수	30% 초과	국가데이터처 가계동향조사	1990년대 이후 최고 수준
서울 1인가구 규모·비중	약 163만 가구, 39.3%	국가데이터처(2023년 기준)	서울 가구 구조의 핵심 변화
서울 1인가구 중 29세 이하 비중	26.3%	국가데이터처	청년 1인가구 비중이 상당함
1인가구 최대 어려움	균형 잡힌 식사, 4.79점	서울시 발표자료(2025)	식생활이 대표적 생활위험
민간 저가식당 지도 서비스 확산 속도	11일 4.5만 방문, 3주 94만 이용자	2026년 보도	저가 식당 탐색 수요의 사회적 신호
서울 외식가격 예시(2026.4)	비빔밥 11,692원 · 짜장면 7,731원 · 삼겹살 18,154원 · 냉면 12,615원	한국소비자원 참가격	청년 식비 압박의 참고 지표

* 서울 1인가구 통계는 지역언론이 재인용한 국가데이터처 자료이며, 서울시 확정통계(열린데이터광장)와의 대조 확인을 정책 확정 전 병행 과제로 둔다.

Ⅲ. 서울시 기존 정책 현황과 정책공백

서울시와 자치구, 중앙정부, 민간은 이미 청년 식생활 문제를 각각의 방식으로 의제화하고 있다. 직접 식비지원형은 동작구가 가장 선명하고, 관계형 식생활 지원은 서울시 '건강한 밥상'이 대표적이며, 공공 저가가게 정보는 착한가격업소가 담당하고, 나비암과 선한영향력가게는 낙인감 완화형 민간 보완축으로 기능한다. 문제는 '정책 부재'가 아니라 '정책의 파편화'이며, 청년 한끼이음은 이 파편화된 자산을 서울시 단위로 재조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1. 동작구 청년 식비 지원사업

항목	내용
시행·운영	2025년 시작, 2026년에도 지속 운영
담당부서	동작구청 / 노량진청년일자리센터
대상	공고일 기준 동작구 1년 이상 거주, 19~39세 1인가구 미취업 청년 500명(대학 재학생·고시원 거주 취업준비생 등 포함)
지원금액·방식	월 6만 원 × 9개월 = 연 54만 원, 동작사랑상품권(서울페이 기반)으로 지급
사용처	동작구 관내 제로페이 가맹 음식점

항목	내용
부가 혜택	협약 음식점 음식값 10% 또는 1,000원 할인, 음식점에는 홍보(SNS)·소모품비 지원
선발방식	서류요건 검토 후 추천
산정근거	한 끼 3,000원 기준 월 20회 계산(구 발표자료)
2025년 신청자 수	1,295명
부정수급 대응	공고문에 부정수급 시 선정취소 및 전액 환수 조항 명시

출처: 동작구청 노량진청년일자리센터 공식 공고문(2025.3.6), 관련 보도(2025.3.6), 2026년도 재계시 안내.

2. 서울시 '건강한 밥상'(청년 1인가구 소셜다이닝)

항목	내용
대상	서울 거주 또는 생활권 19~39세 청년 1인가구, 2026년 800명
운영 자치구(12개)	강남·관악·금천·노원·동대문·동작·서대문·서초·성동·영등포·은평·중구
내용	요리교실(4회 기수제) + 소통 프로그램(캠핑, 방탈출 등 교류 활동)
지급방식	현금성 지원 아님(참여형 프로그램)
비교 사업	40~67세 대상 '행복한 밥상'은 25개 전 자치구에서 3,500명 규모로 운영

출처: 서울특별시 뉴스로 2026.3.4 게시, 「1인가구 소셜다이닝으로 소통·관계망 강화」.

3. 착한가격업소, 서울페이·서울사랑상품권, 민간 네트워크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는 2024년 8월 전국 8,000개소를 돌파했으며, 2026년 3월 31일 기준 현황(지역·업종·업소명·주소·가격 포함)이 공공데이터포털에 공개되어 있다. 서울시는 자치구별 착한가격업소 명단을 별도 웹사이트(서울시 물가정보)로 제공한다. 지정기준은 지역평균 가격 이하 또는 동결·인하, 청결·친절, 옥외가격 표시 등을 포함하며 자치구별 세부 배점 기준은 지역마다 다르다. 다만 착한가격업소는 일반 소비자 대상 정보서비스로서 청년 전용 포인트·바우처 기능은 갖고 있지 않다.

서울페이(서울Pay+)는 서울사랑상품권 구매·사용뿐 아니라 '서울시 및 자치구 정책수당 지급·사용' 기능을 이미 공식 지원하고 있으며, 동작구를 포함한 여러 자치구가 실제로 이를 정책수당 지급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서울페이는 서울 전역에서 사용 가능한 광역형과 자치구 내에서만 사용 가능한 자치구형 두 유형으로 구분되고, 사용처는 연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으로 한정되며 대형마트·백화점·유흥업소 등은 제외된다. 서울시는 2026년 서울페이 판매대행점 선정 공고에서 운영 범위를 상품권 발행·판매, 결제 가맹점 환전 관리, 모바일 앱 운영, 이용자 및 가맹점 관리까지 명시하고 있으며 계약기간은 2025.12.15.~2028.12.31.이다. 이는 청년 한끼이음의 핵심 전제인 '서울페이-청년정책 연계'가 이미 실현되어 있으며, 새로운 결제 앱을 개발하지 않고도 정책형 식사포인트를 이 인프라 안에서 다룰 수 있음을 뒷받침한다.

나비얌은 결식 우려 아동(아동급식카드 소지자)을 주 대상으로 하는 모바일 식사권 플랫폼으로, 운영사는 (주)나눔비타민(대표 김하연)이다. 실물 급식카드의 신원 노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모바일 인증·QR 결제 방식을 사용하며, 이는 낙인 방지 설계의 유효한 참고 사례다. 재원은 기업 기부(한솔도시락 1,000만 원 기부 → 식사권 1,900장 전환, 2026.5)와 지자체 협약(강서구·건강관리협회 결식아동 지원 협약, 1억 5천만 원 규모) 등으로 조달된다. 다만 나비얌의 주 대상은 청년이 아닌 아동이며, 자립준비청년 대상 확장은 운영사 대표 인터뷰에서 향후 계획으로만 언급되어 현재 시행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 선한영향력가게는 취약계층 대상 자발적 나눔가게 네트워크로 알려져 있으나, 최신 운영 규모와 결제방식은 공개자료상 상세히 확인되지 않아 정책 연계 설계 시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

4. 25 개 자치구 유사사업 현황

2026년 7월 29일 기준 서울시 본청, 청년몽땅정보통, 서울 1인가구 포털, 자치구 공식 누리집에서 '청년 식비지원·청년 밥상·청년 식사바우처·1인가구 식생활·서울페이·지역 음식점 연계' 관련 키워드를 교차 확인한 결과, 25개 자치구 중 동작구를 제외하고는 공개자료상 직접 식비지원형 사업이 확인되지 않았다. 이는 사업의 부존재를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 공개자료 조사에서 직접 확인하지 못했다는 의미이며, 완전한 전수조사는 자치구별 담당부서 확인을 거쳐 시범사업 착수 전 완료할 과제로 둔다.

구분	해당 자치구	확인 내용
직접 식비지원형 확인	동작구	미취업 청년 1인가구 500명, 월 6만 원 × 9개월 지원(유일하게 확인된 직접 식비지원 사례)
건강한 밥상 운영(12개구)	강남·관악·금천·노원·동대문·동작·서대문·서초·성동·영등포·은평·중구	청년 1인가구 소셜다이닝 프로그램 운영, 현금성 지원은 아님
1인가구 생활 프로그램 기반 존재	광진·용산 등	1인가구 대상 프로그램은 있으나 청년 특화 직접 식비지원 미확인
직접 식비지원형 공식 확인 제한적	강동·강북·강서·구로·도봉·노원 외 지역·송파·양천·종로·중랑 등 나머지 자치구	공개자료상 청년 식비지원 유사사업 미확인, 자치구 확인 필요
과거 제안사례 확인 필요	마포	'마포청년 희망 한끼'는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마포구 청년포털 등 공개자료에서 원문이 확인되지 않아 별도 확인 필요

5. 정책공백 정의

서울시에는 청년이 이용 가능한 식사지원처·저가 음식점·민간 나눔가게·소셜다이닝 정보를 한 화면에서 찾고, 동일한 결제경험 안에서 모바일 식사포인트까지 사용할 수 있는 서울시 단위 통합

공공체계가 부족하다.

* 청년뭉땅정보통이 2023년 12월 AI 기반으로 개편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개편 이후 지도형 통합 기능이 이미 부분적으로 추가되었을 가능성은 서울시 미래청년기획관 확인을 통해 최종 결론을 확정한다.

정책공백 분석표

구분	지역범위	정보통합	포인트지급	낙인방지결제	민간연계
동작구 식비지원	1개 자치구	부분	○(현금성)	△(가맹점만 비노출)	×
건강한 밥상	12개 자치구	×	×(프로그램형)	해당없음	×
착한가격업소	전국/서울전역	부분(업소검색만)	×	해당없음	×
나비암	전국(아동중심)	×	○(급식카드대체)	○(모바일인증)	○(기타부)
민간 저가식당 지도 서비스	전국	부분(가격정보만)	×	해당없음	×
청년 한끼이음(제안)	서울 전역(시범 후)	○(목표)	○(목표)	○(목표)	○(목표)

유사사업 비교 및 시사점

사례	성격	장점	한계	한끼이음에 주는 시사점
동작구 청년 1인가구 식비지원	직접 식비지원 + 지역화폐 + 협약가게 할인	직접지원과 지역상권 사용을 결합	자치구 한정, 서울시 전역 체계 아님	서울시 확장형 모델의 가장 직접적인 사례
서울시 건강한 밥상	소셜다이닝·요리·관계형성	식생활 개선과 고립완화 효과	상시적 식비 보조 기능은 약함	포인트 정책과 병행시 효과 확대
착한가격업소	공공 저가가게 정보	공개데이터와 지역분포 정보	청년 지원대상·포인트·후원과 미연결	통합지도의 핵심 기본 데이터
나비암	모바일 식사 바우처·후원연계	낙인감 완화, 후원추적성	공공 청년정책과 미결합	민간후원·QR 바우처설계 참고
선한영향력가게	자발적 나눔가게 네트워크	지역 가게 참여 확장상징성	지원 기준·운영방식이 가게별 상이	공공인증·홍보형 인센티브 설계 참고
미국 SNAP Restaurant Meals Program	공공 급부의 식당 결제 허용	자격 인증·식당 결제제도화	대상·제도 환경이 한국과 다름	자격코딩·가맹점 승인체계 설계 참고
영국 Holiday Activities and Food	식사 + 활동 결합형 지원	식사와 사회적 활동을 함께 다룸	주 대상이 아동·청소년	직접지원과 관계형 프로그램 병행 논리참고

IV. 정책제안 내용

본 제안의 정책명은 '청년과 지역 상생가게를 연결하는 청년 한끼이음 플랫폼'으로 한다. 정책 목적은 청년, 특히 서울 청년 1인가구 중 저소득·미취업 청년의 식비 부담을 완화하고, 그 재원이 지역 음식점·반찬가게·전통시장 식사처에서 순환되도록 설계하여 청년복지와 골목상권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하는 데 있다.

1. 정책 대상

정책 대상은 단계적으로 설정한다. 시범사업에서는 서울 거주 만 19~39세 청년 1인가구를 기본자격으로 하고, 그 안에서 중위소득 기준 이하, 미취업 또는 단기근로 상태, 자립준비청년·가족돌봄청년·주거취약청년 등을 우선순위에 반영한다. 이는 서울시 청년수당이 만 19~34세 미취업 또는 단기근로 청년, 중위소득 150% 이하(월 50만 원×최대 6개월)를 기준으로 설계한 경험과도 연결되며, 한끼이음은 식비 목적 급부이므로 1인가구 여부와 생활 취약성을 더 강하게 반영한다.

구분	좁은 대상안(집중형)	기본 대상안(권고)	확대 대상안
대상 정의	저소득·미취업·1인가구 청년만	1인가구 청년 중 중위소득 충족 + 취약청년 우선(자립준비·가족돌봄·구직단념 등)	서울 청년 1인가구 전반 + 생활권 청년(재학·재직 포함) 일부
예상 규모	1,500명 내외	5,000명 내외	15,000명 이상
행정 난이도	낮음	중간	높음
장단점	예산 통제 용이, 정책효과 선명하나 서울시 체감도는 낮을 수 있음	체감도와 확장성의 균형이 좋으나 자격심사 설계가 다소 복잡	서울시 대표 청년정책으로 성장 가능하나 사회보장협의·예산·정산 부담이 큼

* 본 제안은 기본 대상안(기본형)을 권고한다. 직접 식비지원의 체감이 가능하면서도 서울시 차원의 예산·행정 부담을 감당할 수 있는 범위이기 때문이다.

2. 정책 목표 및 추진원칙

- 청년의 실질 식비 부담을 줄인다(월 5~6만 원 수준은 월 5~6회 외식비에 해당하는 '부분보조'임을 정책 설계 단계에서 명확히 한다).
- 청년이 이용할 수 있는 저가·상생·나눔 식사처의 접근성을 높인다.
- 지원대상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지 않는 결제 UX를 도입해 낙인감 없는 결제방식을 실현한다.
- 지역 음식점과 전통시장·반찬가게의 매출을 늘려 골목상권 활성화에 기여한다.
- 공공예산과 시민·기업 후원을 결합하되, 회계상으로는 분리해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한다.

추진원칙으로는 신규 앱을 개발하지 않고 청년몽땅정보통·서울페이의 기존 기능을 연계하며(서울페이가 이미 정책수당 지급 기능을 갖추고 있어 실현 가능성이 높다), 음식점에 할인을 의무화하지 않고 동작구 방식대로 자율 할인과 공공 소모품·홍보 지원을 병행하며, 정보 제공에 그치지 않고 실제 포인트 지급까지 연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세부사업 구성

- ① 청년 식사지원 통합지도 — 청년몽땅정보통 안에서 착한가격업소, 협약 음식점, 전통시장 식사처, 반찬가게, 민간 나눔가게, 건강한 밥상, 1인가구 프로그램을 지도와 필터 형식으로 통합 제공한다. 착한가격업소 데이터는 공공데이터포털에 이미 구조화된 형태로 공개되어 있어 연계의 기술적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낮을 것으로 판단되나, 실제 연동 가능 여부는 운영기관(서울시 미래청년기획관)의 기술 검토를 거쳐야 한다.
- ② 청년 한끼포인트 — 선정된 청년에게 서울페이 계열 결제수단으로 월 단위 식사포인트를 지급한다.
- ③ 지역상권 연계 — 참여 가게에 홍보, 지도 노출, 일부 수수료 또는 할인 보전, 콘텐츠 제작 지원을 제공한다.
- ④ 민간후원 연계 — 후원금은 별도 회계로 관리되는 '추가포인트 계정'으로만 사용하도록 설계한다. 나비암의 기업 기부 연계 방식(기부금 → 식사권 전환)을 참고 모델로 삼되, 서울시의 기부금 직접 수납 가능 여부는 법률 검토를 거쳐 확정하고, 검토 전까지는 민간 중간지원조직 활용을 기본 전제로 한다.
- ⑤ 청년 서포터즈 연계 — 참여가게 취재·후기·메뉴 콘텐츠 제작을 통해 정책 체감도를 높인다.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2026년 350명 모집)와 역할이 중복되지 않도록 별도 소규모 조직 또는 특별 분과로 운영한다.

4. 지원안 설계

설계안	월 지급액	1인 연간 총액	권고 사용처	편의점 허용	배달앱 허용	권고
보수형	3만 원	27만 원	일반·휴게음식점, 반찬가게	제한적	비허용	체감도 아 비
기본형	5만 원	45만 원	일반·휴게음식점, 반찬가게, 전통시장 식사처	원칙적 비허용	비허용	권고
적극형	6만 원	54만 원	기본형 + 공공배달앱 픽업 시범	원칙적 비허용	공공배달앱 픽업 한정	향후 계 검토

동작구 실제 채택값(월 6만 원)은 정부·지자체가 실행한 유일하게 확인된 1인당 지원액 기준으로, 임의

추정이 아닌 실제 사례에 기반한 산정 근거가 된다. 다만 서울 1식 평균가(비빔밥 11,692원 등)를 고려하면 월 6만 원도 월 5~6회의 외식비만 감당하는 수준이다. 본 제안은 동작구 선례와 서울시 차원의 예산 여력을 함께 고려해 시범 단계에서는 월 5만 원, 9개월 지급을 기본형으로 권고하며, 지원 개월은 동작구와 마찬가지로 준비기간을 고려해 6개월이 아닌 9개월 지급형으로 설계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식사포인트는 1일 결제건수 제한, 월 한도, 주류·사행·대형유통 제외, 타인양도 금지, 이상거래 탐지, 가맹점 모니터링을 통해 관리한다. 업종은 음식점·전통시장·반찬가게로 한정하고 유흥·사행업종은 제외하며(서울지역화폐 일반 기준 준용), 편의점 및 배달앱 허용 여부는 시범사업에서 별도 검증한다. 서울사랑상품권과 서울페이는 이미 가맹점 범위와 결제 관리 경험을 갖고 있으므로, 새로운 앱을 만들기보다 기존 인프라를 정책형 포인트로 확장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V. 소요예산(안)

예산은 정책의 생명선이다. 본 제안은 소규모형·기본형·확대형의 세 시나리오를 제시하되, 정책 체감과 평가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5,000명 규모의 정책체감형 시범안을 함께 제시한다. 최소형과 정책체감형을 구분해 병기하면 심사기관 설명과 예산 편성 단계 협의에 모두 유리하다.

1. 최소 시범 규모 기준(월 5 만 원, 9 개월 기준)

유형	대상자 수	지급 개월	식사포인트 예산	운영비	총사업비	1인당 총비용	비고
소규모형	500명	9개월	2.25억 원	2.5억 원	4.75억 원	95만 원	1개 자치구 MN
기본형	1,000명	9개월	4.5억 원	4.0억 원	8.5억 원	85만 원	2~3개 구 최소 범
확대형	3,000명	9개월	13.5억 원	9.0억 원	22.5억 원	75만 원	5개 이상 구 권 시범

2. 정책체감형 시범 규모(5,000 명 기준)

정책체감형	대상자 수	지급 개월	식사포인트 예산	운영·평가·인센티브	총사업비	1인당 총비용
체감형 기본안	5,000명	9개월	22.5억 원	10.0억 원	약 32.5억 원	약 65만 원
체감형 확대안	15,000명	9개월	67.5억 원	20.0억 원	약 87.5억 원	약 58.3만 원

규모가 커질수록 1인당 총비용이 낮아지는 이유는 고정 운영비가 분산되기 때문이다.

3. 동작구 동일 단가(연 54 만 원) 적용 시 대안 추계

동작구의 실제 집행 단가(1인당 연 54만 원)를 그대로 적용할 경우의 대안 추계는 다음과 같다. 이 방식은 기본형(월 5만 원, 9개월, 1인당 45만 원) 산정과 비교할 수 있는 민감도 검증 자료로 활용한다.

구분	소규모형(1개 구, 400명)	기본형(2~3개 구, 1,000명)	확대형(5개 구 이상, 3,000명)
식사포인트 예산(연 54만원×인원)	약 2.16억 원	약 5.4억 원	약 16.2억 원
운영예산(포인트예산의 25~35% 가 정)	약 0.6억 원	약 1.6억 원	약 4.5억 원
총사업비(개산)	약 2.76억 원	약 7.0억 원	약 20.7억 원
1인당 총사업비	약 69만 원	약 70만 원	약 69만 원

* 운영예산 비율(25~35%)은 공개된 유사사업 운영비 단가를 확보하지 못해 적용한 합리적 가정치이며, 실제 산정 시 서울시 계약심사·예산부서 기준 단가로 재검증이 필요하다. 비용 증가 요인은 지원액 상향, 지원대상 확대, 편의점·배달앱 허용에 따른 관리비용 증가이며, 비용 절감 요인은 신규 앱 미개발(서울페이 기존 인프라 활용)과 청년뎁artment정보통 기존

플랫폼 활용이다.

4. 재원조달방안

- 공공재원(기본): 서울시 청년정책 예산, 자치구 대응예산 — 동작구가 이미 자체 예산으로 유사사업을 수행 중이라는 점이 재원조달 가능성의 근거가 된다.
- 보완재원: 기업 사회공헌기금(나비암·한솔도시락 협력 사례와 같은 실제 선례 존재), 시민 소액후원.
- 서울시가 기부금을 직접 수납할 수 있는지는 법률 검토가 필요하며, 검토 전까지는 민간 중간지원조직 또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활용을 기본 전제로 한다.

VI. 법적·제도적 검토

법제 검토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은 사회보장제도 협의, 지역사랑상품권 법제, 개인정보보호, 후원금 법제다.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변경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의 협의를 요구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 지침도 이를 재확인하므로, 한끼이음이 복지성 직접급부를 포함한 다면 사전 협의를 사실상 필수로 본다. 반면 결제 인프라는 지역사랑상품권법 기반의 서울사랑상품권·서울페이를 활용하는 것이 법적 안정성이 가장 높다.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 9765호, 2025.7.14. 시행)는 청년활동·청년시설 지원 등의 근거 조항을 담고 있으며, 경비 지원 시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르도록 명시하고 있어 이 조례를 준용한 보조금 형태의 식비지원 설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청년 기본 조례가 식비지원을 직접 명시하는지는 조례 전문 재검토를 거쳐 확정한다.

검토 항목	판단	근거·비고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필수 검토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은 보건복지부 협의 대상
서울시 청년 기본 조례 근거	현행 제도상 가능	서울특별시조례 제9765호(2025.7.14 시행). 식비지원 직접 명시 여부는 조례 전문 재검토 필요
지방보조금 지급 근거	가능(개연성 높음)	청년 기본 조례가 경비 지원 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르도록 명시
서울페이 활용 적합성	높음	서울사랑상품권·정책수당·가맹점 관리 경험이 이미 축적. 서울Pay+가 '정책수당 지급·사용' 기능을 공식 지원하고 동작구가 실제 사용 중
외부 공개 API 연계	공개자료상 확인 불가	기술적·계약적 확인이 추가로 필요. 실무적으로는 운영사 계약형 기능 연계가 더 현실적
개인정보 처리	필수 준수	주민·소득·고용·결제정보를 다루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이 명확
후원금 모집·사용	엄격 관리 필요	기부금품 목적 외 전용 금지, 사용결과 공개 의무. 직접 수납 가능 여부는 기부금품법 등 관계기관 유권해석 필요
부정수급 환수 근거	가능(개연성 높음)	동작구 공고문에 부정수급 시 선정취소 및 전액 환수 조항이 이미 명시되어 유사 규정 준용 가능
자체 신규 결제앱 개발	비권고	기존 서울페이 활용이 법적·기술적 부담을 줄임

VII. 개인정보 보호 및 낙인감 방지 설계

개인정보와 낙인감 방지 설계는 정책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별도로 강조한다. 사용자가 결제할 때 가맹점이 '이 사람은 지원대상자다'라는 사실을 알 수 없도록, 화면상으로는 일반 포인트 결제와 동일한 UX를 적용한다. 신청 단계에서 수집한 소득·고용·가구 정보는 대상 판정 DB에만 남기고, 결제·정

산 DB에는 가명화된 식별키만 전달한다. 후원계정도 이용자가 체감하기로는 같은 포인트처럼 보일 수 있지만, 회계상으로는 반드시 분리해야 한다. 이는 공공감사 대응과 개인정보 최소처리 원칙에 모두 부합한다. 나비암 사례(실물 급식카드 노출 문제를 모바일 인증·QR 결제로 해소)와 동작구 사례(서울페이 일반 결제화면과 동일하게 운영)는 모두 '결제 시점에 지원 대상임을 드러내지 않는' 설계가 이미 실무적으로 가능함을 보여주며, 청년 한끼이음은 이 두 선례를 결합한다. 최소수집 원칙에 따라 자격 확인에 필요한 최소 정보만 수집하고, 자격 확인 후에는 즉시 파기하는 방식은 서울시 1인가구 소셜다이닝 사업에서도 이미 채택하고 있는 방식이다.

처리 항목	최소 수집 내용	분리 여부	보유기간 원칙	보호 방안
신청·자격 판정	성명, 생년월일, 주소, 1인가구 여부, 소득·고용 증빙 최소항목	분리	법정 보존 필요 최소 기간	접근권한 최소화
포인트 발행	내부 식별키, 지급월, 지급액	분리	회계 보존기간	가명처리 저장
결제·정산	결제일시, 업종, 금액, 가맹점 코드	분리	회계·감사 목적 기간	가명처리 저장
후원내역	후원액, 후원처, 사용 포인트 계정	분리	지정 회계 기준	공공예산과 별도 장부
성과평가	가명화된 이용패턴 데이터	분리	분석 목적 범위 내	통계 목적 외 재사용 제한

Ⅷ. 추진체계 및 기관별 역할

청년 한끼이음의 기술 구조는 가능한 한 경량형으로 설계한다. 청년몽땅정보통은 정책 검색과 신청 창구 역할을, 서울페이/서울사랑상품권 인프라는 포인트 발행·결제·정산 역할을, 착한가격업소 데이터는 기본 가맹점 정보 역할을, 1인가구 포털과 건강한 밥상은 프로그램 연계 역할을 맡는 구조가 가장 합리적이다. 서울시 내부의 역할분담도 명확히 한다. 청년정책 총괄은 청년정책 담당부서가 맡되, 1인가구·식생활 프로그램 연계는 복지실, 결제 인프라와 가맹점 정책은 소상공인정책 부서, 데이터 연계와 정보보호는 정보화·데이터 부서, 현장 집행은 자치구가 맡는 구조를 권고한다. 청년몽땅정보통은 서울특별시 미래청년기획관이 운영하며, 서울페이 운영과 서울사랑상품권은 서울시 소상공인정책과 영역에 있다는 점이 이 분담 구조를 뒷받침한다.

역할	주관 기관	보조 기관	비고
사업 총괄·예산	서울시 청년정책 담당부서(미래청년기획관)	기획조정실, 자치구	정책 기준 설정. 청년몽땅정보통 운영기관
1인가구·건강한 밥상 연계	서울시 1인가구지원과	자치구 1인가구센터	관계형 프로그램 연계
가맹점 모집·상권 연계	서울시 소상공인정책과	자치구, 상권조직	음식점·반찬가게·전통시장 포함
포인트 발행·정산	서울페이 운영기관(서울신용보증재단 등, 명칭 확인 필요)	판매대행점·운영사	계약형 연계 필요
지도·데이터 연계	청년몽땅정보통 운영체계	열린데이터광장, 자치구	착한가격업소 데이터 활용
대상자 모집·선정	자치구(동작구 등 유사사업 수행 경험 자치구 우선)	청년몽땅정보통	대상자 선정 노하우 활용
착한가격업소 데이터 소관	행정안전부 지역경제과	서울시	데이터 연계 협의 대상
후원금 운영	별도 지정 회계 주체	재단·위탁기관(민간 중간지원조직) 검토	공공예산과 분리
성과평가	서울시 + 외부 평가기관	서울연구원 등(후보, 미확정)	정량·정성 병행

* 각 기관의 정확한 공식 명칭과 소관 업무 범위(RACI)는 서울시 조직도 및 사무분장 규정을 통한 재확인을 정책 확정 전 병행 과제로 둔다.

IX. 시범사업 실행계획

1. 시범 자치구 선정

시범 자치구는 동작·관악·동대문을 권고한다. 동작은 직접 식비지원 선례와 서울페이 사용 경험이 있어 검증형 파일럿에 적합하고, 관악은 청년 비중과 청년 1인가구 비중이 높아 수요형 파일럿으로 적합하며, 동대문은 건강한 밥상과 1인가구 생활지원 기반이 있어 연계형 파일럿으로 적합하다. 기존 식비지원 사업이 있는 자치구만 포함할 경우 학습효과는 크지만 정책확산성을 보는 데 한계가 있고, 반대로 없는 자치구만 포함할 경우 초기 운영 리스크가 크다. 따라서 선례 보유 1곳 + 청년밀집 1곳 + 연계기반 1곳 조합이 가장 합리적이다.

평가 기준	동작	관악	동대문
직접 식비지원 선례	30	10	10
청년·청년 1인가구 밀도	15	25	15
식생활·1인가구 프로그램 기반	15	15	20
수요 가시성	20	15	10
가맹점·상권 확장 가능성	15	15	15
총점	95	80	70

2. 1년 시범사업 타임라인

시범사업 착수에 앞서 청년몽땅정보통-서울페이 연계 가능성과 착한가격업소 데이터 연동을 서울시 미래청년기획관-서울페이 운영기관과 공동으로 사전 확인하는 0단계를 1개월간 선행한다. 이후 시범사업은 1년 단위로 운영하되, 실제 포인트 지급은 준비기간을 고려해 9개월 지급형으로 설계한다.

월	주요 업무	담당 부서	완료 기준	예상 위험 · 대응
0단계(사전)	서울페이-청년몽땅정보통 연계 가능성 사전 기술검토	미래청년기획관·서울페이 운영기관	연계 가능성 검토보고서	연계 기술적 난항 → 결제와 검색을 분리 운영하는 대안 마련
1월	사업계획·예산 확정	서울시 총괄부서	내부방침 확정	부서 간 역할 미정 → PM 회의체 설치
2월	사회보장협의·법무검토 착수	서울시·복지부 협의	협의 자료 제출	협의 지연 → 범위 축소 시 나리오 동시 준비
3월	데이터 표준·가맹점 기준 확정	서울시·자치구	운영지침 초안 완료	기준 과다 복잡 → 필수·선택 기준 분리
4월	지도·결제 기능 개발	운영기관	테스트 버전 완료	계약 지연 → 우선 MVP 개

월	주요 업무	담당 부서	완료 기준	예상 위험 · 대응
				발
5월	보안점검·개인정보 검토	서울시·운영기관	취약점 보완 완료	개인정보 이슈 → DB 분리 설계 강화
6월	대상자 모집·선정	서울시·자치구	선정 통보 완료	서류 부담 → 행정정보 연 계 확대
7월	1차 포인트 지급	서울시·정산기관	지급 성공률 99% 이 상	결제 오류 → 즉시 장애 대 응 체계
8월	가맹점 추가 확보	자치구	권역별 가맹점 보강	지역 편차 → 공백 권역 우 선 모집
9월	이용패턴 분석	총괄부서	월간 리포트 발행	업종 쏠림 → 업종·시간대 제한 조정
10월	중간평가·제도 수정	서울시	개선안 확정	KPI 부진 → 지급·가맹 구 조 수정
11월	민간후원 시범 연계	서울시·민간	후원 계정 운영 개시	회계 논란 → 별도 계정·공 개 리포트
12월	최종평가·확대 결정	서울시·외부기관	평가보고서 완료	차년도 자원 부족 → 단계 적 확대안 제시

X. 성과지표 및 평가계획

성과지표는 단순한 지급 인원 수보다 넓게 설정한다. 직접효과를 보여주는 포인트 사용률, 월평균 결제 횟수, 식비 부담 변화, 끼니 생략 빈도 변화, 상권효과를 보여주는 참여가게 수, 결제액, 신규고객, 재방문율, 행정효율을 보여주는 예산집행률, 신청 대비 선정률, 1인당 행정비용, 부정사용 건수, 민원 건수, 정보 갱신주기를 함께 측정한다. 건강한 밥상과 같은 프로그램을 병행할 경우에는 고립감 완화, 사회적 연결감까지 보조지표로 포함한다. 각 지표의 목표치는 동작구·건강한 밥상 등 유사사업의 실제 운영 실적을 서울시 담당부서로부터 입수한 뒤 확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아래 표의 시범 목표는 시범사업 설계를 위한 제안값으로 제시한다.

지표	정의	자료원	측정주기	시범 목표
포인트 사용률	지급 대상 중 1회 이상 이용 비율	결제 DB	월	75% 이상
월평균 사용 횟수	참여자 1인당 월 평균 결제 건수	결제 DB	월	3회 이상
식비 부담 변화	참여 전후 자가평가 개선	설문	반기	10%p 개선
끼니 생략 빈도 변화	주당 끼니 생략 횟수 변화	설문	반기	감소
참여가게 수	실제 결제 가능한 가맹점 수	운영 DB	월	연말 1,000개 수준
결제액	총 식사포인트 결제액	정산 DB	월	예산 집행률 90% 이상
신규고객 비중	포인트 결제 이용자 중 신규 방문 비율	가맹점 조사	반기	30% 이상
신청 대비 선정률·1인당 행정비용	신청 대비 선정 비율, 총운영비÷지원인원	운영 DB	반기	행정효율 관리 지표로 병행 관측
만족도	5점 척도 평균	설문	반기	4.2 이상
낙인경험 응답률	지원 사실 노출 경험 응답 비율	설문	반기	10% 이하
부정사용 적발률	이상거래 또는 환수 비율	운영 DB	월	1% 이하

X I. 위험관리

위험관리는 사업 설계 단계에서 선제적으로 다뤄야 한다. 이 정책의 리스크는 기술보다 제도와 운영에 더 많이 내재해 있다. 특히 중복수혜, 자격판정 형평성, 가맹점 품질, 후원금 투명성, 개인정보 노출, 지역 편차, 25개 자치구 전수조사 미완료에 따른 정책 공백 결론의 불확실성은 초기 시범단계에서 가장 강하게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위험 내용	예방 방안	발생 시 대응
중복수혜(동작구 등 기존 사업과 중복)	기존 사업 DB 대조(청년몽땅정보통합조회 활용)	사후 조정·환수 또는 택일 신청 원칙
대상 선정 형평성	우선순위 점수제 + 일부 추천	이의신청 절차 운영
소득·미취업 상태 확인 부담	행정정보 공동활용 확대	제출서류 간소화
대학생 포함 여부 논란	재학생·휴학생 기준 명시	단계별 확대 검토
서울 생활권 청년 포함 논란	시범은 서울 거주자 중심	확대 단계에서 별도 검토
음식점 할인 부담	할인 의무화 금지	인센티브로 보전
포인트 부정사용	업종·시간·건수 제한	환수·가맹 해지
가맹점 품질 문제	가격·위생 확인	신고·점검·퇴출
가맹점 부족	반찬가게·전통시장 포함, 착한가격업소까지 사용처 확보	추가 모집, 인접 자치구로 확대
배달앱·편의점 허용 논란	1차 시범에선 제한	2차 시범 때 재검토
개인정보 노출	DB 분리, 일반결제 UX	즉시 보완
낙인감 발생	정책명·화면·홍보 문구 관리	UX/홍보 수정
민간후원금 투명성 논란	별도 회계, 월별 공개	외부감사
시스템 연계 지연(서울페이-청년몽땅정보통)	0단계 사전 기술검토 필수화, MVP 우선 개발	연계 불가 시 결제·검색 분리 운영
데이터 노후화	갱신일 표기, 오류신고	월간 정비
자치구 간 격차	공통 기준 마련	차년도 매칭 지원
일회성 사업 우려	KPI와 확대로드맵 설정, 지방보조금 조례 근거의 다년도 사업화 검토	평가 후 본사업 전환
민간서비스와 역할 충돌	보완적 제휴 구조	계약·제휴 가이드 마련
상권 활성화 효과 미흡	가맹점 다양화	인센티브 재조정
25개 자치구 전수조사 미완료로 인한 정책 공백 결론의 오류 가능성	본 제안을 1차 정책제안으로 규정하고 후속 전수조사를 시범사업 착수 전 필수 선행과제로 명시	전수조사 결과 반영해 정책공백 정의 재확정

X Ⅱ. 단계별 확대 로드맵

서울시 전역 확대는 단계적으로 진행한다. 먼저 정보 통합과 최소기능제품(MVP)을 만들고, 다음으로 2~3개 자치구에서 식사포인트를 운영하고, 그다음에 후원·상권 연계를 엮고, 성과평가 및 제도 정비(조례 근거 마련 검토)를 거쳐 건강한 밥상 운영 12개 구를 우선 확대한 뒤, 나머지 자치구로 순차 확대하며 마지막으로 서울시 전역 정례사업으로 전환하는 순서가 바람직하다. 이 순서가 가장 비용 효율적이며, 평가 결과를 반영해 제도를 수정하기도 쉽다.

단계	범위	핵심 과업	목표
정보 통합 단계	서울시	통합지도·데이터 연계	정책 접근성 확보
시범 지급 단계	2~3개 자치구	식사포인트 운영	결제·정산·수요 검증
상권·후원 연계 단계	시범구 확대	가맹점 인센티브·후원 계정 도입	체감 가치 확대
제도 정비·우선 확대 단계	건강한 밥상 운영 12개구 우선	성과평가, 조례 근거 마련 검토	정례사업화 기반 구축
서울시 확대 단계	25개 자치구	공통기준 정착, 나머지 자치구 순차 확대 (전수조사 결과 반영)	서울형 청년 식사안전망 구축

X Ⅲ. 기대효과

기대효과는 청년, 지역상권, 서울시 행정 세 층위에서 동시에 발생한다.

- 청년: 동작구 수혜자 기준 월 6 만 원(한 끼 3,000 원 환산) 수준에 준하는 실질적 식비 보조와 식생활 안정. 민간후원을 결합하더라도 결제경험이 일반결제와 같다면 '지원받는 사람'이라는 낙인보다 일상적 간편결제에 가까운 경험이 가능하다.
- 지역 음식점·반찬가게·전통시장: 신규 청년 고객 유입과 반복방문에 따른 매출 효과, 결제수수료 보전 등 인센티브를 통한 부담 없는 참여.
- 서울시: 청년몽땅정보통·서울페이라는 기존 자산의 활용도 제고, 분절된 청년·1 인가구·상권정책을 하나의 가시적 성과로 통합.

* 위 효과는 동작구 등 유사사업의 구조적 유사성에 근거한 분석이며, 청년 한끼이음 자체의 실증된 효과는 시범사업 평가를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다.

XIV. 정책 확정 전 병행 협의·확인 과제

본 제안은 공식자료를 근거로 정책의 타당성과 설계 방향을 제시한 1차 정책제안이며, 시범사업 착수 전 서울시·자치구 담당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다음 사항을 확정할 것을 권고한다.

서울시·자치구에 직접 확인해야 할 사항

- 청년몽땅정보통의 2023 년 12 월 AI 개편 이후, 지도 기반 식사지원처 검색 기능이 이미 존재하는지 여부(정책공백 결론 확정 필요)
- 서울페이(서울 Pay+)를 청년 전용 정책성 식사포인트로 신규 발행할 경우의 발행 절차와 소요기간, 외부 개발자용 공개 API 연계 범위
-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및 관련 자치구 조례에 식비지원을 직접 근거 짓는 조항이 있는지,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통한 별도 사업 공고만으로 가능한지 여부
- 동작구 사업의 2025 년도 실제 집행률, 이용률, 참여자 만족도(시범사업 목표치 설정 필요)
- 서울시가 시민·기업의 기부금을 직접 수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 중간지원조직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지 여부
- 건강한 밥상 미운영 13 개 자치구에 별도의 청년 식생활 지원사업이 있는지 여부
- '마포청년 희망 한끼' 정책제안 사례의 원문 실재 여부(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마포구에 직접 확인 필요)

25 개 자치구 전수조사가 필요한 영역

- 청년 식비지원·식사바우처·생활비지원·소셜다이닝·반찬지원 등 유형별 사업의 자치구별 운영 현황, 예산, 대상, 이용률
- 자치구별 착한가격업소 수와 청년 밀집지역 간의 지리적 상관관계(서울 열린데이터광장 원자료 분석 필요)

+ 이번 제안에서 심층적으로 다루지 못한 사례 (더해도 좋고 ...모르겠어요)

- 국내 타 지방자치단체(서울 외 지역)의 청년 식비지원 사례
- 일본·영국·미국 등 해외 청년·저소득층 식사지원 사례의 심층 비교
- 농림축산식품부 '천원의 아침밥' 등 중앙정부 사업의 최신 운영 현황
- 선한영향력가게의 최신 운영 규모와 방식
- 서울 청년의 '월평균 식비'를 직접 조사한 서울시 공식 통계(서울서베이 등)

* 위 항목은 시범사업 실행 이전에 관계부서 확인 또는 추가 조사를 완료할 것을 권고한다.

부록. 출처 및 핵심 수치 근거표

핵심 수치 근거표

핵심 수치	값	출처
최근 5년 음식서비스 물가지수 상승률	약 24.7%(2021~2025)	국가데이터처(통계청) KOSIS
2026.1월 외식물가지수 전년 동월비	+2.9%	국가데이터처
엔겔계수	30% 초과	국가데이터처 가계동향조사
서울 1인가구 수	약 163만 가구(전체의 39.3%)	국가데이터처(2023년 기준, 지역언론 재인용)
서울 1인가구 중 29세 이하 비중	26.3%	국가데이터처
전국 1인가구 수(2024년)	804.5만 가구(36.1%)	국가데이터처, 2025.12.9 발표
1인가구 최대 어려움	균형 잡힌 식사, 4.79점	서울시 발표자료(2025)
청년 건강한 밥상 운영 규모 (2026)	800명 / 12개 자치구	서울특별시 뉴스룸 2026.3.4
동작구 지원 규모	500명, 월 6만 원×9개월=연 54만 원	동작구청 공고문(2025.3.6)
동작구 2025 신청자 수	1,295명	동작구청 관련 공고·보도
착한가격업소 전국 규모	8,000개소 이상(2024.8 기준)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2024.8.14
민간 저가식당 지도 서비스 확산	출시 11일 누적방문 4.5만 건, 3주 이용자 94만 명 수준	2026년 보도
청년뭉땅정보통 통합 정책 수	약 2,000여 개	서울시 뉴스룸·공식 게시물
서울시 청년수당	월 50만 원×최대 6개월, 만 19~34세	청년뭉땅정보통 공식 안내
서울페이 판매대행점 계약기간	2025.12.15.~2028.12.31.	서울시 2026년 선정 공고
서울 외식 평균가(2026.4)	비빔밥 11,692원 / 짜장면 7,731원 / 삼겹살 18,154원 / 냉면 12,615원	한국소비자원 참가격
체감형 기본형 시범예산	약 32.5억 원(5,000명 기준)	본 제안서 추계
최소 기본형 시범예산	약 8.5억 원(1,000명 기준)	본 제안서 추계

공식자료 출처

- 동작구청 노량진청년일자리센터, 「2025 년 동작구 청년 식비 지원사업 신청자 모집 공고문」, 2025.3.6

- 서울특별시 뉴스룸, 「1 인가구 소셜다이닝으로 소통·관계망 강화」, 2026.3.4
- 서울특별시 뉴스룸, 「4 년간 1 인가구 상시 지원 가동해 온 서울시, 1 인가구 종합계획 수립 나선다」, 2026.3.17
-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현황」 공공데이터, 2026.3.31 기준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행정안전부 보도자료), 「'착한가격업소 8 천 개소' 돌파」, 2024.8.14
- 청년몽땅정보통(youth.seoul.go.kr), 서울특별시 미래청년기획관 운영
- 국가데이터처(통계청), 「2025 통계로 보는 1 인가구」, 2025.12.9 발표 및 KOSIS 소비자물가동향
- 국가법령정보센터,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 9765 호, 2025.7.14 시행), 사회보장기본법·지역사랑상품권법·개인정보보호법
- 서울시 물가정보(sftc.seoul.go.kr), 지역별 착한가격업소 현황
- 서울 Pay+ 공식 앱 소개(App Store, Google Play)
- 서울 열린데이터광장, 서울 1 인가구 포털, 관악구·동대문구 등 자치구 공식 자료

보조자료(언론보도·민간자료) 출처

- 아시아경제, 「'맛은 포기했습니다'...'하루 5000 원' 버티는 식사로 내몰린 청년들」, 2026.4.17
- 이투데이, 「계속 치솟는 외식비...짜장면·삼겹살 등 줄줄이 올라」, 2026.5.20
- 한국경제, 「지난해 1 인 가구 첫 800 만 넘어...서울 가장 비중 높아」, 2025.12.9
- 네이트뉴스, 「서울 동작구, 관내 음식점과 협력해 '청년 식비 지원사업' 추진」, 2025.3.6
- 리포테라, 민간 저가식당 지도 서비스 확산 관련 보도, 2026.4.17
- 나눔비타민 공식 홈페이지(nanumnavi.com); 라이프인, 「결식위험아동 급식카드, '지원'을 넘어 '연결의 구조' 만들다」, 2026.1.3
- 쿡앤셰프뉴스, 「한솔도시락, 결식 우려 아동 위해 1000 만 원 기부... 나비암과 협력」, 2026.5.27

* 위 보조자료는 정책 수요나 운영 아이디어를 보강하는 용도로만 활용했으며, 핵심 제도 판단은 공식자료에 근거해 유지했다. 25개 자치구 전수조사, 해외 비교사례, 세부 법령 유권해석 등 확인하지 못한 항목은 XIV장에 별도로 정리했다.